



2025년 네번째

재정정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목 차

01

CHAPTER

재정분석



-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개정 사항 03
- 학교예술교육 사업, 지방 이관으로 최대 82% 예산 감소 06
- 시·도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비교 09

02

CHAPTER

재정이슈



- 지역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와 방향 15
- 주민참여로 주민이 만족할만한 지방예산을 꾸릴 수 있을까? 18
-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21

03

CHAPTER

재정뉴스



- 재정뉴스 27

'재정정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최근 중앙부처 및 국내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국가·지방재정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정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04

CHAPTER

재정통계



주요 경제지표 31

세종시 주요 통계 34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37

01

재정분석

- ①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개정사항
- ② 학교예술교육 사업, 지방 이관으로 최대 82% 예산 감소
- ③ 시·도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비교

1.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주요 개정사항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보고서(2025.8.21.)

-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기준경비 협의 신설, 보조금 평가연계(5% 증액), 예비비 전용 제한, 잉여금 세분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화와 집행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별 분리운영, 전출금 항목 신설, 존속기한 만료 기금의 폐지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기금관리의 체계화 및 재원 흐름 명확화를 추진했음

□ 개 요

- 행정안전부는 2025.7.31.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제404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제336호)」 공표
 - ▶ 총 23건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기준 위반 논란

□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19건]

1. 기준경비 관련

- ① 기준경비 협의 규정 신설
 - ▶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 자치단체 신설·통합 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 가능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기준경비 설정
 - ▶ 구성 지자체 간 협의로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③ 기준경비 운영 점검 강화
 - ▶ 행안부가 자료요청·시정요구 가능 (제5항 신설)
- ④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연계
 - ▶ 평가기준 준수·사후조치 이행 시 보조금 총액한도 5% 증액 가능

2. 세입·세출 과목 체계 정비

① 법정잉여금 세분화

- ▶ ‘법정잉여금’을 ‘지정재원잉여금’과 ‘기타법정잉여금’으로 분리하여 재원 목적별 관리 강화

② 예비비 항목 간 전용 제한

- ▶ 예비비 내 통계목 상호 간 융통 사용 금지 (일반·재해예비비 전용 차단)

③ 보조금 반환수입 용어 명확화

- ▶ ‘전년도’를 ‘지난연도’로 변경하여 직전년도 및 이전연도 포함

3.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개선

① 회계·기금 여유재원 통합관리 명시

- ▶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

② 이월예산 집행 기준 신설

- ▶ 이월액 확정 후 집행된 예산은 ‘이월예산 집행’으로 처리하며 출납폐쇄기한 예외 금지

③ 상습 체불사업주 예산편성 제한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반영, 보조·지원 예산편성 제한 명시

④ 행사차출 경비 지급기준 명확화

- ▶ 실비성격 외 업무는 시간외수당으로 처리

□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개정 (1건)

① 성별수혜분석 양식 보완

- ▶ ‘사업수혜자 통계출처’ 항목 신설(통계청, 백서, 통계연보 등 기초통계자료 활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 (3건)

① 기금 폐지 절차 명확화

- ▶ 존속기한 만료 시 폐지 절차 및 자산·채권·채무 귀속 조례 명시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별 분리 운영

- ▶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편성 및 회계시스템 입력 구분 명시

③ 전출금 항목 신설

- ▶ 기존 '기타지출' 내 포함된 전출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 명시

□ 종합평가

- 기준경비 협의 신설, 보조금 한도 증액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으로 평가됨
- 예비비 전용 제한, 이월예산 명확화 등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 기여함
- 기금 계정 분리, 전출금 신설 등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관리체계 제고에 의미 있음
- 다만,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미제시는 행정절차상 미비로, 향후 보완 필요

2 학교예술교육 사업 지방 이관으로 최대 82% 예산 감소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 보고서(2025.9.17.)

- '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방 교육재정으로 이관하면서 지방 재원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됨. 이에 '23~'26년 정부 예산과 '23~'25년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을 분석하여 국비 상실 이후 변화를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

□ 문화체육관광부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 구성

- ▶ '26년 예산안 기준 학교 예술교육 지원은 4.4% 증액, 전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음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은 7개(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지원,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으로 구성
- 증가한 사업에는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59.3%)’,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4.4%)’ 등이고 '25년 신규 추진되었던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 편성에서 제외됨

○ 학교문화예술교육 단위 사업 예산 구성

- ▶ 사업 운영비를 비롯해 학교 예술강사의 사회보험료·급량비 등의 보조 성격만 유지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은 사업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나뉘었으나, '24년부터 단계적 이관으로 '26년에는 사업비 및 처우개선비만 지원하게 됨
- ⇒ 결국,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교육청이 협조한 형태였으나 예산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교육부 정책으로 이관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 전국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분석

- ▶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의 감소가 학교예술강사 지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침
- ▶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은 '23년 대비 17개 광역 중 12개 시·도 감소
- 세종(160.6%), 강원(129.8%), 전북(35.6%), 충남(30.8%) 등으로 증가함
- 서울(△47.5%), 부산(△27.3%), 대전(△34.4%) 등에서 감소함

- ▶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은 '23년 대비 17개 광역 중 10개 시·도가 감소 또는 동결
- 전북(122.5%), 강원(99.4%), 경남(60.0%) 등으로 증가함
- 서울(△82.2%), 경기(△21.8%), 인천(△10.0%), 광주(△9.0%) 등 감소세, 대구, 대전, 전남, 충북 등은 동결 수준이거나 미미한 수준임

□ '23년 지방 이관 이후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복원 요구

- ▶ 국정과제 요구 사항과 달리 학교예술강사의 보조적인 간접비 증액만 이루어짐
-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문화예술 교육 강화)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지원('25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역량 개발 (과제 104번)”의 요구 반영
- 다만, 편성된 처우개선비는 사회보험료, 급량비, 출장비 등의 인건비 외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예술강사의 ‘인건비’ 항목으로 보기 어려움

○ 연도별 학교예술강사 1인당 평균 지원금 변화

-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국비·지방교육비 합계에 따른 지원금 산출 결과, 이관되기 이전인 '23년은 약 16,137,423원이나, '25년 9,036,419원으로 56.0% 축소되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임

[국비 및 지방교육재정 합계에 따른 학교 예술강사 1인당 지원금 추정]

(단위: 백만원, 명, 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인건비(국비)	46,502	23,251	0	0
	처우개선비(국비)	2,396	1,198	8,812	9,382
	지방교육재정	32,128	33,772	32,873	-
	합계(A)	81,026	58,221	41,685	-
선정예술강사 수(B)		5,021	4,805	4,613	4,613
1인당 평균 지원금 추정 (원, C=A/B)		16,137,423	12,116,753	9,036,419	-
23~25년 증감률(%)				△56.0	

○ 1인당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예산의 변화와 지역별 증감 양상

- ▶ 전체 1인당 문화예술교육 활동 예산은 증가했으나, 11개 광역은 평균 20.2% 감소
- 세종(146.4%), 강원(135.9%), 전북(39.9%), 충남(30.5%), 대구(15.9%)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종과 강원은 두 배 이상 증가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 서울(△46.6%), 대전(△33.5%), 부산(△27.5%), 울산(△18.3%), 경북(△14.6%), 제주(△13.7%), 인천(△13.3%), 경남(△13.3%), 전남(△13.1%), 광주(△9.5%) 등으로 축소

[광역별 학생(10~19세) 1인당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명, 원, %)

구분	2023년			2025년 8월 기준			평균 증가율	
	인구 (10-19세)	문화예술 교육활동	1인당 교육비	인구 (10-19세)	문화예술 교육활동	1인당 교육비	증감액	증감률
서울	733,211	15,278	20,837	721,039	8,028	11,134	△9,703	△46.6
대전	137,836	2,527	18,333	135,949	1,658	12,196	△6,138	△33.5
부산	263,339	15,601	59,243	264,020	11,345	42,970	△16,273	△27.5
경기	1,320,631	17,651	13,366	1,327,809	14,363	10,817	△2,549	△19.1
울산	109,462	5,189	47,405	109,463	4,242	38,753	△8,652	△18.3
경북	217,311	7,346	33,804	215,317	6,217	28,874	△4,930	△14.6
제주	70,469	7,079	100,456	70,076	6,076	86,706	△13,750	△13.7
인천	272,079	9,990	36,717	275,235	8,761	31,831	△4,886	△13.3
경남	315,947	11,421	36,148	313,790	9,838	31,352	△4,796	△13.3
전남	158,933	7,521	47,322	155,478	6,390	41,099	△6,223	△13.1
광주	147,525	6,144	41,647	144,361	5,441	37,690	△3,957	△9.5
세종	50,736	170	3,351	53,654	443	8,257	4,906	146.4
강원	129,053	5,311	41,154	125,689	12,203	97,089	55,935	135.9
전북	164,304	17,438	106,133	159,969	23,653	147,860	41,727	39.3
충남	202,057	18,218	90,163	202,521	23,829	117,662	27,499	30.5
대구	214,121	6,135	28,652	212,813	7,064	33,193	4,541	15.9
충북	144,446	4,775	33,057	142,936	4,738	33,148	91	0.3
전체 계/평균	4,651,460	157,794	44,576	4,630,119	154,289	47,684	3,108	7.0

□ 분석결과 및 시사점

- ▶ 지방교육재정 이관으로 예산 편성은 광역 중 상당수가 부정적 감소 또는 동결
-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당사자인 예술강사에 대한 방임과 공약 이행 재검토 필요
- ▶ 국가 지원 감소는 교육감 재량인 지방 문화예술교육 축소를 유인하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 ▶ 중앙-지방 갈등 심화, 예술강사 생계 위협,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세 가지 부정적 효과를 고착화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개입과 교육청 간 조정 장치가 동시에 요구됨

3. 시·도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비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2025.9.)

- 시·도별 주요 경제 지표의 추이를 비교하여 지역별 재정 여건, 산업 규모, 인구 흐름을 이해하고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시·도별 주요 경제 지표 분석

○ 시·도별 재정 여건

- ▶ (1인당 GRDP) 지역내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생산액을 의미하며, GRDP가 높을수록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3년 기준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은 울산(8,124만원), 충남(6,471만원), 서울(5,826만원), 전남(5,551만원)이며, 낮은 지역은 대구(3,099만원), 부산(3,476만원), 광주(3,545만원)임
 - 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5.7%), 울산(5.5%), 대전(5.2%)이며, 낮은 지역은 세종(1.6%), 경기(3.1%), 경북(3.5%), 제주(3.5%)임
 - 울산과 전남은 1인당 GRDP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높은바, 석유화학·제철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의 예산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서울(73.6%), 경기(55.7%), 세종(54.3%), 낮은 곳은 전북, 전남, 경북, 강원으로 모두 20%대 수준이며, 서울과 타 지역 간 격차가 큼
 - ▶ (재정자주도) 자체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2025년 기준 재정자주도 상위 지역은 서울(74.7%), 강원(70.6%), 울산(66.2%)이며, 하위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으로 모두 50%대 수준임
 - 재정자주도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보다 광역시·도 간 차이가 더 크고, 광역시보다 도 지역이 높은 경우가 많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이전재원을 포함할 경우 재정자주도 측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다른 지역보다 재정 상황이 더 나을 수 있음을 시사
- ※ 강원은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높지만 재정자주도는 2번째로 높은 반면, 경기도는 재정자립도는 2번째로 높지만 재정자주도는 10번째로 높음
- ※ 세종은 재정자립도는 3번째로 높지만, 재정자주도(62.3%)는 11번째로 높음

< 17개 시·도 주요 경제 지표 >

구분		1인당 GRDP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인구 순유입
기준년도		2023년	2019 ~2023 연평균 증가율	2025	2025	2023	2019 ~2023 연평균 증가율	2023	2019 ~2023 연평균 증가율	2024
단위		(천원)	(%)	(%)	(%)	만개	(%)	(만명)	(%)	(명)
수도권	서울	58,255	4.8	73.6	74.7	45.1	3.8	476.5	3.5	△44,692
	인천	38,840	4.7	49.2	60.3	10.5	4.5	93.0	3.9	25,643
	경기	43,070	3.1	55.7	63.2	55.7	5.9	475.6	4.7	64,218
비수도권	부산	34,762	4.2	42.7	55.5	13.8	3.5	115.8	2.8	△13,657
	대구	30,985	4.8	41.9	60.0	9.1	2.9	74.3	3.4	△4,712
	광주	35,452	4.4	39.8	58.3	5.9	3.1	50.3	2.9	△7,962
	대전	36,645	5.2	41.1	59.8	5.8	4.1	53.5	3.5	△1,693
	울산	81,235	5.5	46.1	66.2	3.8	3.2	43.1	2.4	△4,854
	세종	43,174	1.6	54.3	62.3	1.3	10.7	10.4	8.3	2,808
	강원	40,713	4.8	25.7	70.6	6.3	3.7	48.4	3.7	△2,527
	충북	54,214	3.8	31.8	64.6	6.5	5.4	61.7	4.2	3,245
	충남	64,709	4.2	32.2	63.7	8.6	5.2	80.1	3.3	14,664
	전북	36,283	4.5	23.6	61.9	6.9	3.4	53.0	2.2	△6,060
	전남	55,513	5.7	23.7	64.8	7.3	4.5	59.2	3.8	△3,988
	경북	48,812	3.5	24.3	65.6	9.9	3.6	88.4	3.2	△8,003
	경남	42,144	4.5	34.3	65.8	12.7	3.6	111.3	3.2	△9,069
	제주	38,450	3.5	33.1	64.4	3.1	6.0	21.4	3.8	△3,361

○ 시·도별 산업 규모

- ▶ **(사업체 수)** 2023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55.7만개), 서울(45.1만개), 부산(13.8만개)이며, 적은 지역은 세종(1.7만개), 제주(3.1만개), 울산(3.8만개)임

※ 사업체 수에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재직 기관은 제외되었음에 유의

- 2020년 대비 2023년 사업체 수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8.8만개), 서울(4.7만개)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2만개 미만으로 증가함
- 2020~2023년 연평균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10.7%), 제주(6.0%), 경기(5.9%)이며, 낮은 지역은 대구(2.9%), 광주(3.1%), 울산(3.2%)임
- ▶ **(종사자 수)** 2023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476.5만명), 경기(475.6만명), 부산(115.8만명)이며, 적은 지역은 세종(10.4만명), 제주(21.4만명), 울산(43.1만명)임
- 2020~2023년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8.3%), 경기(4.7%), 충북(4.2%)이며, 낮은 지역은 전북, 울산, 부산으로 모두 2%대임

- 수도권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많고, 특히 경기·인천은 연평균 증가율도 높은바 수도권으로의 산업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종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 규모는 작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도별 인구 유입과 유출

- ▶ (인구의 이동) 2021~2024년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지역은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세종이며, 그 외 지역은 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많음
- 2024년 순유입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64,218명), 인천(25,643명), 충남(14,664명)이며, 순유출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44,692명), 부산(△13,657명), 경남(△9,069명)임
- * 지역에 유입된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감하여 산출하며 양의 값은 해당 지역으로의 순유입, 음의 값은 순유출을 의미함
- 수도권의 경우 세종·충북·충남으로만 인구가 유출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대부분 경기·인천이 흡수하는 양상임
-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충북·세종에서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 외 지역은 유출되고 있는바, 충북혁신도시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 충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삼성SDI 사업장 등의 영향으로 보임
-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바,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 세종시는 최근 몇 년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인구 순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며 외형적 성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1인당 GRDP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낮아 산업·재정 구조의 내실을 다져야 함
- ▶ 공공행정 중심의 산업 편중을 완화하고, 민간기업 유치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적 경제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직주근접형 도시구조와 생활 및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층과 가족단위 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근 지역과의 산업·생활권 연계를 통해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허브로 성장을 도모해야 함
- ▶ 궁극적으로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산업 다각화, 재정자주도 제고, 광역 연계 강화를 통해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도 기능해야 할 것임

02

재정이슈

- ① 지역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재도의 과제와 방향
- ② 주민참여로 주민이 만족할만한 지방예산을 꾸릴 수 있을까?
- ③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1. 지역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와 방향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2025.9.)

- 지방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논의 배경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지방세, 세외수입 등) 불균형에 따른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어디에서나 균등한 수준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재정을 재배분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비보조금, 자치구 및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 지역발전 정책 방향성과 지방재정제도 개선 필요성

- ▶ (지역주도 발전)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침체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스스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정책 추진¹⁾
 - 지역주도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국세 집중과 지역 간 세원 격차를 고려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

□ 개선과제 1: 지방교부세 확대

○ 지방교부세의 개념

- ▶ (지방교부세)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및 행정운영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교부세가 있고, 그 중 보통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90%)²⁾을 차지함
 - (보통교부세) 정부가 매년 내국세의 19.24% 중 97%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기초로 교부, 재정부족액이 큰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기여

※ 보통교부세가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의를 고려해 보통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통칭하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본 논의에서도 지방교부세로 기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의미함을 밝힘

1)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 공약과 추진과제를 반영하였고, 향후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그 이행을 총괄·지원,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반영 예정

2)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교부세 총 67조 385억원 중 보통교부세는 60조 3,018억원(90%)

○ 지방교부세 관련 국정과제

- ▶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추진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마련되며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그 법정률은 2006년 이후 20년간 인상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 확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어 지방교부세 확대 필요

○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 관련 쟁점

- ▶ (재원보장 기능 약화) 보통교부세의 증가율이 지방의 재정부족액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조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됨

* 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의 비율이며, 조정률이 낮을수록 부족액을 보통교부세로 충당하지 못함을 의미

※ 재정부족액: ('16년) 36조원 → ('19년) 53조원 → ('22년) 62조원 → ('25년) 81조원
보통교부세: ('16년) 32조원 → ('19년) 46조원 → ('22년) 53조원 → ('25년) 58조원
조정률: ('16년) 89.75% → ('19년) 86.43% → ('22년) 85.99% → ('25년) 72.17%

-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비례해 교부되므로,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낮을수록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됨
- ▶ (자주재원 감소)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율적 성격의 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규모도 점차 축소됨
- 대규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경직성 경비의 지출 구조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을 줄이는 추세*임
- * 지방의 자체사업 비중: ('08년) 46.1% → ('25년) 35.4% / 자체사업 비중 20% 미만 지자체 수: ('08년) 26개 → ('25년) 51개

□ 개선과제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및 정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념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의 개발 및 혁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설치된 특별회계³⁾
- 특별회계 내에 4개의 계정(지역자율·지역지원·세종·제주)이 있으며, 그 중 지역자율계정은 포괄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
- * 보조금 교부조건(지방비 부담 의무,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등이 있는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달리, 핵심 목표 및 기능을 포괄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보조사업

3) 특별회계 명칭 변경: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 ('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국정과제

- ▶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고 그 운영에 있어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용이 보장되는 지역자율계정 규모 확대, 5극3특 등 초광역권 사업 지원을 위한 계정 신설, 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 사전조정권 부여
 - 지방시대위원회는 2026년도 지역자율계정을 3.8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47개에서 121개로 늘리는 것으로 개편안 마련

○ 현행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관련 쟁점

- ▶ (세입의 불안정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주세*,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각종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이 있으며, 타 회계 전입금에 상당 부분 의존함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와 제79조에 따라 주세의 40%는 지역자율계정, 60%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입 재원이 됨

- 주세와 같이 법률로 규정된 독자적·안정적 재원 기반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향후 정책 변화로 타 회계 전입금 축소 시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를 확대·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 ▶ (포괄보조금과 자율성) 지역자율계정 대상 사업 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지가 많아진 것이기는 하나, 결국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선택·집행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자율성 확대에 불과함
 - 사업 유형의 세분화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 범위 내 선택만을 허용해 포괄보조금의 본래 취지인 지방의 자율적 기획과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

□ 개선방향

○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인상 검토

- ▶ 지역의 재정난 해소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인상 반드시 필요
 -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안정성 및 자율성 강화

- ▶ 지역자율계정의 재원 확보의 안정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지역 자율성 강화
 - 주세의 80%~100%를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 포괄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세부사업을 기능별로 통합·범주화하여 지역 자율성 강화

4) 지특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의 비중: ('24년) 70.9%, 9조 2,410억원 / ('25년) 73.6%, 10조 2,315억원

2. 주민참여로 주민이 만족할만한 지방예산을 꾸릴 수 있을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가을호)

- 30년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보고자 함

□ 서론

-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30여 년을 맞이함
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주민 삶의 질 제고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주민 수요에 맞는 재정사업 추진이 앞으로의 핵심 방향임을 보여줌

□ 향후 30년,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 지방재정은 재정분권이나 제도 논의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재정 역할 강화가 요구됨
- ▶ 재정은 정책 추진의 수단이자 중앙-지방 간 균형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 자원 이므로, 앞으로의 지방재정제도는 이러한 가치와 맥락을 반영한 전략적 운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5)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통해 지방재정이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주민 삶의 질에 직접 기여하고, 그 중심에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미래 지향가치의 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제도	현재 지향가치 (현행 법 목적)	미래 지향 가치	추진전략
지방세	투명성>책임성>자율성	자율성>책임성>건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관계와 재정민주주의 • 지방세 기간세체계 정립 • 주민체감형 지방세체제 확립 • 지방소비세 조정기능 강화
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형평성>건전성>투명성	형평성>자율성>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경비 보장에서 공공서비스 보장으로 - 재정형평화 기능 재정립 • 국고보조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맞춤형 재정기능 이양
재정관리제도	투명성>효율성>책임성	책임성>자율성>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관리를 지방 자율관리로 전환 •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는 재정제도 전환

□ 주민참여제도의 부활은 4년~5년마다 찾아온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입 이후 4~5년 주기로 관심이 높아졌다가 약화되는 흐름,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화 논의와 준비가 부족했던 점도 한계로 지적됨

○ 브라질의 사례

-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범사례로 꼽히던 브라질도 '00년대 초반까지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현재는 축소 추세를 보임
- ▶ 예산 규모는 작았지만 재량이 컸던 '90년대와 달리, '00년대 이후 경직성 지출 증가로 투자 여력이 축소됨
- ▶ 행정부·입법부 간 자원 배분 갈등이 심화되어 새로운 투자 재원이 부족해짐
 -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고정비용 증대, 재원 확충의 한계 등으로 참여예산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음

○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 환경에 따라 '출렁이는 제도'

- ▶ 우리나라에서도 '04년 이후 제도는 확대·축소를 반복하며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참여예산 규모를 좌우하는 경향이 뚜렷
 - 서울시: '13~'21년 400~600억원 → '25년 64억원 수준으로 급감
 - 인천시: '22년 485억원 → '25년 14.4억원 / 광주시: '22년 190억원 → '25년 90억원
- ▶ 경기 변동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따라 사업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관 주도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누구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인가

-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책임성 제고와 투명한 재정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채발행제도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 주민참여예산제도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제60조에 근거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침과 플랫폼을 마련했음에도 지자체별 참여예산 규모·구조·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과 공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 광역시 간 제도운용은 유사하나 담당자와 조직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며,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은 지자체의 의지·역량에 좌우되고 있음

□ **국민주권시대의 주민책임성 확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부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실질적 주민참여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함

○ **제도 본질과 주민주권 강화 필요성**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정치적 이념이나 단기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제도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다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예산 규모 확대나 임시 개편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공시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짐
- ▶ 결국 주민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통해 재정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민주적 과정임

○ **현행 운용체계의 점검과 개선 방향**

-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 수요 반영과 예산 효율성 제고, 책임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용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인력 부족이나 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제약 요인은 협력 구조를 통해 개선해야 하며, 첫째 한계를 분석해 다음 해 개선계획을 미리 세워야 함

○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 강화**

- ▶ 법인기부를 허용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단년도 예산운용체계, 기금운용방식, 담당 인력의 역할 등을 포함한 사전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주민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그 실질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참여 기반 확충, 행정의 지원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2.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5-22)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의 특성과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 여건

○ 여건 종합

- ▶ 세종시 노후산업단지는 대규모 산업단지 부재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렵고, 신도시-구도시, 신규산단-노후산단 불균형 문제 심화
- ▶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압력 유입으로, 휴·폐업 방치, 물류창고 활용 등 생산기능의 약화, 낮은 스마트공장 보급률 등 제조혁신 문제 발생
- 입주업체의 규모는 큰 편이고, 바이오, 자동차 등 세종시 미래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앵커기업이 입주하여 잠재력을 보유
- ▶ 신도시 개발로 정주환경이 개선되는 남부권과 달리 북부권의 경우 정주기반 부족으로 관외 출퇴근 문제가 심화하고 청년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문제 발생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여건 종합]

물리·인프라	산업·기업	근로·정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단지의 산발적 분포로 규모의 경제 확보 한계 ▪ 신규단지 동시 공급으로 신규-노후단지 불균형 발생 ▪ 기반시설/생산시설 노후화 및 오염물질 배출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업체 규모는 크고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앵커기업 입주 ▪ 행정복합도시 일대 개발압력 유입으로 휴·폐업 방치 ▪ 스마트공장 보급 비중이 작아 제조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권 단지 일대 정주기반 부족으로 관외 통근 다수 ▪ 청년 근로자 수요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부족/노후화 문제 ▪ 산업단지의 문화요소 및 미래전략산업 연계 정체성 약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산업단지의 생산기능 약화에 따른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자족성 확보에 한계 ▪ 세종시 내 신도시와 구도시, 신규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간의 불균형 문제 심화 ▪ 주요 국비지원 사업 추진 한계로 인해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조성 및 산업고도화 한계 		

□ 세종시 발전 목표와 단지별 실태에 근거한 발전전략 필요

- ▶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실태분석 결과) 산업단지별 물리, 산업, 정주환경 측면의 문제점과 활성화 요인은 차이를 나타냄

- ▶ 세종시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산업입지 측면의 방향과 개별 산업단지의 실태가 조화된 전략이 필요
-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향 속에서 단지별 물리, 산업, 정주환경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 중점산업이나 입지 측면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

노후산업단지별 규모, 입지 등의 특성과 산업적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단지로 ❶전의, ❷조치원, ❸응암·명학 단지를 선정함

❶ 조치원산업단지의 활성화 방향

- 위치, 규모측면에서 세종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지나나, 산업기능이 감소하여 거점단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 세종시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산업기능을 회복하는데 초점
- 앵커기업으로 삼양스퀘어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성 중인 세종스마트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세종시의 산업거점이자 지역 내 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필요

❷ 전의산업단지의 활성화 방향

- 세종시 북부권의 산업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대의 정주기능을 갖춘 중심지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생활권은 천안에 형성
- ⇒ 부족한 정주환경과 인프라 문제, 세종시와의 단절 문제에 대응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약품 분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❸ 명학·응암산업단지의 활성화 방향

- 응암농공단지는 각종 인프라의 노후화와 쇠퇴 문제가 발생하나, 명학단지는 각종 인프라가 양호하고 대기업 생산공장이 다수 입주하여 성장하는 등 단지 간 격차가 발생하고 단절되어 있음
- ⇒ 응암·명학단지는 2개 단지 간 단절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과 문화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적으로는 의약품/바이오 분야 앵커기업과 연계한 고도화를 검토

□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제안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전략적인 추진

- ▶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기획력 및 전략적인 대응
 - 최근 노후산업단지 관련 정부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
- ▶ 단지별 개별 지원사업과 대규모 패키지 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 정부 지원사업에서 효율성과 타 사업 간의 연계의 중요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단지별 특성에 맞는 개별(소규모)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패키지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전략 검토 필요

[세종시에서 단기적으로 추진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공모사업(안)]

부문	사업명	내용	비고
인프라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복지, 근로, 외관,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산단(농공포함), 대개조지역 대상 - 단지당 10개 참여기업/기업 자부담 -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대상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산업단지 내부 및 주변 도시숲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산업단지 유휴 녹지공간 활용 ▪ 단지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신청 가능
산업 / 기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휴폐업공장 재개발 후 창업·중소 기업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 ▪ 노후산단(농공 포함), 대개조지역 대상
근로자	열린문화광장 조성사업	단지 내 문화광장 (공원 등)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유휴부지(공원) 활용 가능 ▪ 지자체 현물 매칭 가능/신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근로자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국가/일반산업단지 대상/신규 ▪ 지자체 현물/현금 매칭 가능
	임대전용 기숙사 건립	기업 대상 임대형 기숙사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국가/일반산업단지 대상/신규 ▪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임대 가능

- ▶ 지원사업별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대상단지 선별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위해서 지역 내 각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 단지별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활성화 시책 추진

- ▶ 산업단지는 단지별로 특성과 활성화를 위한 이슈가 다양할 뿐 아니라 시기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특성과 문제점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재한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가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필요

03

재정뉴스

① 재정뉴스

주요 재정 관련 뉴스 모음

□ 세종시, 소상공인 초저금리자금 100억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2025. 9. 30.]

○ 최대 2,000만원 대출, 2년간 실질 부담금리 0.2~1% 수준

- ▶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자금 지원 사업은 인당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2년간 연 4% 이차보전으로 실제 부담금리는 0.2%~1% 수준으로 낮아짐
- ▶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임
- ▶ 이번 자금 조달로 공실상가에 입점한 기업이나 임차 소상공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 등의 안심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9월 동행축제 매출, 6,634억원 달성 [중소벤처기업부 2025. 10. 14.]

○ 동행제품 온라인 기획전, 제주개막식판매전 등 판매행사 외에도 상생소비복권 등의 소비촉진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직접 견인

- ▶ 동행축제는 내수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전개되는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행사임
- ▶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전국적인 연계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함
- ▶ 온라인판매전 6,307억원, 오프라인판매전 327억원의 직접 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4,85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원이 판매됨

□ 상생페이백, 9월 환급(페이백) 대상자 415만명에 총 2,414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2025. 10. 16.]

○ 9월 환급(페이백) 지급 대상자 415만명, 1인당 평균 5.8만원 환급

- ▶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명이 신청,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 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환급(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만명(대상자 1,012만명의 41%)이며,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0월 15일에 총 2,414억원의 환급액(페이백)이 지급되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8,155원임
- ▶ 2,414억원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소비액을 제외한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으로, 약 1조 2,070억원(지급액의 5배)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이응패스 1년 일상바뀌, 대중교통 이용 13% 증가** ([세종특별자치시 2025. 10. 16.](#))

○ **이응패스 도입 후 대중교통 이용률 급증,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생**

- ▶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만 9,539건이었던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량이 2024년 9월~2025년 8월에는 7만 8,638건으로 크게 늘어남
- ▶ 이응패스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매달 2만 4,000원 수준으로, 유료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1만 5,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됨
- ▶ 이응패스로 절감한 교통비를 생활비(50.3%), 여가·취미활동(14.2%) 등에 재사용하면서 지역 소비가 확대되었으며, 이응패스 예산 64억원을 투입해 지역에 2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됨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2025. 10. 20.](#))

○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협업을 통해 7개 군별 시범사업 운영을 적극 뒷받침 하고,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확산의 토대 마련**

- ▶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행정포기군)을 선정함
- ▶ 시범사업은 2년간('26~'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임
- ▶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하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함

04

재정통계

- ① 주요 경제지표
- ② 세종시 주요 통계
- ③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01. 주요 경제지표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고 용 |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5. 5.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전년동월비/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5. 5.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전년동월비/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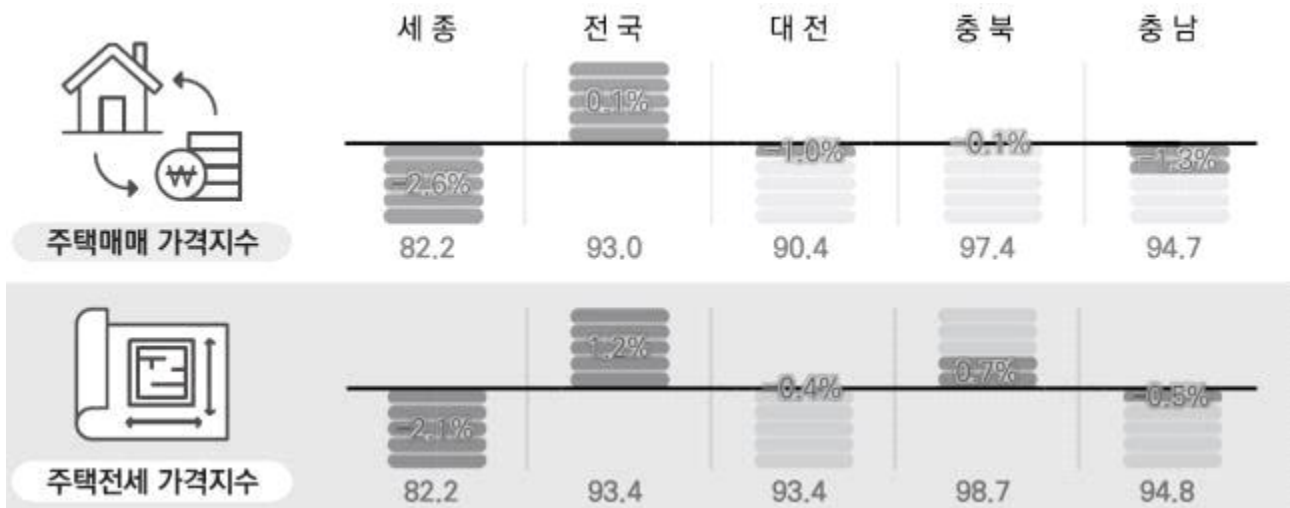
소 비 | 전년동월비/2022=100

25. 5.



부동산 | 전년동월비/2022.1=100

25. 5.



수출입 | 전년동월비

'25. 5.



금융 | 전년동월비

'25. 5.



지역특성 | 전년동월비

'25. 5.



0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링크 2025년 2분기 세종통계분기보

2025년 2분기(4월~6월) 기준



물 가 · 가 계	<div> <div>김밥  3,083원</div> <div>라면  4,500원</div> <div>돼지갈비  14,417원</div> <div>삼겹살  7,333원</div> <div>생맥주  4,250원</div> <div>피자  12,567원</div> <div>치킨  21,000원</div> <div>택배이용료  5,500원</div> <div>미용료  16,500원</div> <div>수영장 이용료  2,500원</div> <div>공동주택관리비  224,550원</div> <div>당구장 이용료  10,400원</div> </div>
고 용	<div> <div>15세 이상 인구 326천명</div> <div>경제활동 인구 219천명</div> <div>비경제활동 인구 107천명</div> <div>취업자 214천명</div> <div>실업자 5천명</div> <div>경제활동 참가율 67.1%</div> <div>고용률 65.6%</div> <div>실업률 2.2%</div> <div>15-64세 고용률 68.9%</div> </div>
재 정 · 금 융 · 보 험	<div> <div> <div>추가대출</div> <div>8,908.5 십억원</div> </div> <div> <div>예금은행</div> <div>7,581.2 십억원</div> <div>주택담보대출 6,264.3십억원</div> <div>기타대출 1,317.0십억원</div> </div> <div> <div>비은행예금취급기관</div> <div>1,327.3 십억원</div> <div>주택담보대출 325.3십억원</div> <div>기타대출 1,002.0십억원</div> </div> </div>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 출처 : 국토교통부 (단위 : %)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단위 : %)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지	전	답	임야	기타
2025. 2/4	0.217	0.185	0.374	0.585	0.574	0.140	-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단위 : %)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관리(통합)	농림	자연환경보전
2025. 2/4	0.264	0.167	0.315	0.430	0.287	0.488	0.553	0.502	0.385	0.065

03.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출처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2025.9.1.)

1. 연도별 학교 현황

○ 학교 수

(단위: 교, 원)

학교급	구분	2021 (4.1.)*	2022 (4.1.)	2023 (4.1.)	2023 (9.1.)	2024 (4.1.)	2024 (9.1.)	2025 (3.1.)	2025 (4.1.)
유치원	공립	60	62	63	63	64	65	64	64
	사립	2	2	2	2	2	2	0	0
	계	62	64	65	65	66	67	64	64
초등학교	공립	51	52	53	53	53	54	55	55
중학교	공립	26	27	27	27	27	27	28	28
고등학교	공립	20	20	20	20	20	20	21	21
	사립	1	1	1	1	1	1	1	1
	계	21	21	21	21	21	21	22	22
특수학교	공립	1	1	2	2	2	2	2	2
각종학교	공립	0	0	0	0	1	1	1	1
총계	공립	158	162	165	165	167	169	171	171
	사립	3	3	3	3	3	3	1	1
	계	161	165	168	168	170	172	172	172

* 4.1.은 교육기본통계 조사 기준일

○ 학급 수

(단위: 학급)

학교급	구분	2021 (4.1.)	2022 (4.1.)	2023 (4.1.)	2023 (9.1.)	2024 (4.1.)	2024 (9.1.)	2025 (3.1.)	2025 (4.1.)
유치원	공립	418	433	434	434	429	439	433	433
	사립	8	7	5	5	4	4	0	0
	계	426	440	439	439	433	443	433	433
초등학교	공립	1,472	1,587	1,650	1,653	1,619	1,641	1,608	1,609
중학교	공립	609	643	658	658	659	659	674	674
고등학교	공립	455	481	519	519	561	561	576	576
	사립	24	24	24	24	24	24	24	24
	계	479	505	543	543	585	585	600	600
특수학교	공립	34	35	48	48	55	55	58	58
각종학교	공립	0	0	0	0	6	6	6	6
총계	공립	2,988	3,179	3,309	3,312	3,329	3,361	3,355	3,356
	사립	32	31	29	29	28	28	24	24
	계	3,020	3,210	3,338	3,341	3,357	3,389	3,379	3,380

○ 학생 수

(단위: 명)

학교급	구분	2021 (4.1.)	2022 (4.1.)	2023 (4.1.)	2023 (9.1.)	2024 (4.1.)	2024 (9.1.)	2025 (3.1.)	2025 (4.1.)
유치원	공립	6,474	6,311	6,178	6,207	5,860	6,037	5,899	5,846
	사립	126	111	76	75	42	35	0	0
	계	6,600	6,422	6,254	6,282	5,902	6,072	5,899	5,846
초등학교	공립	30,726	32,230	32,614	32,649	32,131	32,460	30,905	30,981
중학교	공립	13,822	14,809	15,500	15,477	15,768	15,805	16,645	16,609
고등학교	공립	10,305	10,913	11,833	11,746	13,150	13,068	13,720	13,705
	사립	513	571	611	607	624	616	638	637
	계	10,818	11,484	12,444	12,353	13,774	13,684	14,358	14,342
특수학교	공립	175	186	229	229	279	262	299	313
각종학교	공립	0	0	0	0	39	55	미정	59
총계	공립	61,502	64,449	66,354	66,308	67,227	67,687	67,468	67,454
	사립	639	682	687	682	666	651	638	637
	계	62,141	65,131	67,041	66,990	67,893	68,338	68,106	68,091

※ 세종늘벗학교(위탁형 대안학교) 학생 수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에 포함

- 새학년 시작 후 위탁절차를 진행하여 향후 학생 수 반영 예정(3월말)

○ 교원 수

(단위: 명)

학교급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유치원	공립	506	561	585	595	588	591	588
	사립	18	15	12	10	6	5	0
	소계	524	576	597	605	594	596	588
초등학교	공립	1,744	2,066	2,150	2,222	2,255	2,280	2,243
중학교	공립	934	1,018	1,092	1,145	1,129	1,124	1,106
고등학교	공립	887	969	1,016	1,062	1,095	1,151	1,137
	사립	50	50	48	47	48	47	46
	소계	937	1,019	1,064	1,113	1,143	1,198	1,183
특수학교	공립	49	46	47	55	66	72	72
각종학교	공립	-	-	-	-	-	9	13
총계	공립	4,120	4,660	4,890	5,079	5,133	5,227	5,159
	사립	68	65	60	57	54	52	46
	계	4,120	4,660	4,950	5,136	5,187	5,279	5,205

※ 휴직·파견 교원 포함, 본청 근무 교원 제외

「세종재정」 2025년 네번째

발행일 2025. 11.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기획·조정 차하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작성 김운화 사무관, 문건아 주무관
신현지 주무관, 이옥선 주무관
김재원 주무관

전화 044-300-7531~7535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